새만금…친환경 개발은 시대적 '善'이다

- 만경 수역의 수질과 간척지의 용도가 핵심 -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신시도를 거쳐 군산 비응도까지 33 km의 방조제를 건설해 8,300 만평 가량의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1 년 시작되어 2011 년에 완공되는 세계 대규모 간척 사업이다.

지난 5월 새만금 방조제 제4공구 사석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바다 외곽을 메우는 일은 사실상 끝났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 정부가 지속 추진으로 결정한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국토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이율 배반적인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1997 년 시화호 문제가 터지자 1999 년 새만금 사업을 중단했다가, 지난 2001 년 공사를 재개하면서 "동진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며 순차적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5월 10 일 "당선자 시절부터 환경을 황폐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사는 계속 추진하되 내부 개발 용도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개발의 핵심은 '수질 보전'

친환경 개발의 핵심은 만경 수역의 수질과 간척지의 용도로 집약된다. 동진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할 때 착수한다는 DJ 정부 때의 '순차 개발' 방안은 결국 만경 수역의 수질이 4급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만금 사업이 다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지금까지 나온 수질 개선 대책만으로는 만경강 수역의 수질은 농업 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은 5급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새만금 사업의 두 수역인 만경강과 동진강 중에서 먼저 개발하기로 한 동진강 유역은 공동 조사단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 환경부 전망대로라면 4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만경강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책까지 모두 적용해도 연평균 총 인 농도는 5급수인 0.103 ppm에 머무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농업 용수로 4급수 이내를 권장하고 있어 총 인 농도만으로 보면 0.003 ppm을 초과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수치는 환경부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전주권 그린벨트 녹지 보전이나 환 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까지 모두 이상 없이 실현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수치는 미국 환경청(EPA)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하는 과영양화 상태로,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산소 고갈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수질 보전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23 개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강을 끼고 있는 전주와 익산 등지에 2,820 km의 하수 관거를 신설하거나 기존 관거의 개량을 계획했다.

또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 물을 바다로 빼내는 환 배수로와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과 금강 물을 만경강으로 유입시키는 연결 수로를 설치하는 한편 호소 내부에는 인공 습지와 인 처리 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질보전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애초보다 1조 4,568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 예산 확보'가 관건

이미 투입된 8,500여억원을 합치면 새만금 사업의 환경 보전을 위해 2조 3,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어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환경부가 4대강 수질 개선 대책비로 수십 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수질 개선을 위한 기초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사를 계속하고 이를 감시, 자문하는 연구소마저 설치되지 않는다면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친환경 개발은 만경강 수질 대책을 이행한 뒤 새만금 내부 지역을 친환경적인 간척 방식으로 조성하고 갯벌 보전 등 해양 환경 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즉 새만금 내부 지역은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되, 생태 마을과 조류 서식지, 종합 관광 농원, 침전지 조성 등 자연 친화형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간척지를 복합 산업 단지로 조성하려는 전북도 등과 이해 관계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또 전북 군산에 위치한 400만평 규모의 군장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 남산을 깎은 면적 만큼인 5,000만m^3의 토사가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20배 가량인 8,500만평의 새만금 간척 사업에는 최소한 남산 20개 만큼의 토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만을 복합 산업 단지로 조성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형편이다.

마지막 물막이를 남겨 놓은 제4호 방조제(군산 옥도면~비안도).

이 때문에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매립 기간 20 30년 이상을 포함해 50 80년 걸려 복합 단지와 공항을 만든다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기존에 계획된 부지의 15% 가량인 1,000만평을 농사 지역으로 우선 개발한 후 부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해 복합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새만금은 10년 이내에 매립이 끝나 산업·물류 기지나 국제 관광·정보 기지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전체 면적을 매립해 복합 단지로 조성한다면 예산은 18조 5,000억 28조 5,000억원, 시기는 110 167년이 걸리며 민간 자본을 유치하더라고 50 8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환경 보전에는 악영향

이와 함께 최근 건설교통부가 전주권 그린벨트 225.4 m^2(6,818만 평)를 해제함에 따라 새만금 갯벌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할 때도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 모두를 보전 녹지로 지정해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건교부와 전주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 유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오염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수질이 개선되거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작년 기준, 농업 용수 기준(0.1 ppm)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던 만경강의 수질 오염이 더욱 악화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사업 추진 방침이 나올 당시 그린벨트 지역을 모두 보전 녹지로 유지하고 환경 기초 시설을 튼튼히 만들더라도 물을 부패시키는 총인(T-P)의 농도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문제

'친환경 개발'이라는 결정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또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국무총리실은 순차 개발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해 7월부터 중앙 정부에 시민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환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당시 전북도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수질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해수 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 문제 해결과 사전·사후 관리 체계 확보, 획기적인 내부 이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새만금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CJ

홍인철
연합뉴스 전북지사 기자